

민주 “대통령실 한동훈 사퇴요구, 당무개입 법적 조치”

“정치 중립 위반, 형사처벌 행위...김건희 여사 보호, 명백한 이해충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본인 입으로 확인해줬다”며 “이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으로 판단한다.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면 브리핑에서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정치 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더욱이 당무 개입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4·10 총선을 앞두고 당에 호재가 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며 총공세를 벌였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의 핵심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정 최고위원은 “공중 암투, 서부 활극 같은 대통령실발(發) 한동훈 사퇴 요구선이 주말을 강타했다”며 “전하, 나라를 위해 중전마마를 이제 버리십시오”, 용산공예는 이런 충언을 하는 충신은 없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한동훈이 갈라지는 ‘갈라쇼’를 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김건희 특검과 명품백 수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전야처럼 이미 그 불길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두 사람의 갈등이 4월 총선을 앞둔 일종의 ‘정치쇼’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 힘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국민 속이기’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윤석열 부부의 얼굴을 지우고 한동훈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면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 않으나 제2의 6·29 선인 같은 ‘한동훈 돌보이기’ 작전일 수 있다”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총선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은 대통령 리스크와 당을 분리하는 것이었을 것”이라며 “수준 낮은 약속 대선이 맞는지, 불화설이 맞는 것인지는 결국 한 위원장의 향후 행동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부디 일련의 사태가 한동훈표 정치공작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넸던 최재영 목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와 “김 여사 본인인 인사권자 위치에서 고위 인사를 주무르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을 했다”며 “다음에



민주 인재 9호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영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9차 인재 영입식에서 인재영입인사인 공영운(오른쪽 두번째)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접견 기회가 있으면 증거 채집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래서 2차 접견 때 물레가메라로 촬영했고,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연합뉴스 kroh@kwangju.co.kr

‘이재명 피습·김건희 명품백’ 질의 정무위 파행

野 단독 소집에 여당·정부 인사 불참...29일 회의·증인 출석 재의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 야당 단독 소집 요구로 열렸으나 여당과 정부 인사들의 불참으로 공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현안 질의를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윤한홍 의원과 강민국 의원만 참석해 야당의 일방적인 회의 소집에 항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측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한홍 의원은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 헬기 이송 신고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한 곳을 불러서 (질의를) 하면 결국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정치적 압력을 넣기 위한 게 아니냐 해서 (회의 소집을) 반대한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민생에 대한 현안 질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야당 당 대표를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하는 건 헌정사에도 오점”이라며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이 대표의 헬기 이송만 문제 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의원은 “권익위에서 김 여사 관련해서는 왜 조사를 안 하는 건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왜 조사를 하는 건지 묻고 답해야 한다”며 “국회의 가장 근본적 기능은 여야를 떠나 묻고 답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대테러센터를 통해 이 사안(이 대표 피습 사건)을 축소·은폐한 기획자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어떻게 축소·은폐에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무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진실화해위 활동 1년 연장...尹대통령 동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오는 5월 26일 조사 활동 만료일을 앞두고 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근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황 수석은 “윤 대통령은 과거 역사에서 억울한 피해를 본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은 국가 정체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국민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조사 기간 연장에 흔쾌히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2021년 5월 27일

부터 3년 기한으로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희생 사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등의 진상 규명 활동을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접수된 2만1000여개 사건 중 조사가 진행된 비율은 약 53%로, 조사 기간 1년 연장을 통해 나머지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진실화해위는 조만간 열리는 전체위원회에 조사 기간 1년 연장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김성진 “국민연금 인정 산입 기간 아이당 2년으로”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

4·10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광산에 출사표를 던진 김성진 예비후보는 22일 “현재 2명의 자녀부터 인정되는 12개월 내지 18개월의 국민연금 인정 산입 기간을 아이당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여성 4대 안심 공약”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출산·양육에 대한 가입 기간으로 변경해 양육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일·가정 양립형 시간 탄력제 일자리를 확대해 경력 단절을 막고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며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응하고 경제활동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성 맞춤형 교육 훈련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 보호·지원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CCTV 추가 설치·경찰 순찰 확대 등으로 안심로드 조성 등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여성이 행복한 나라는 국가 경쟁력도 강한 나라가 된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해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등을 지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박노원 “악의적 루머 확산, 법적 책임 물을 것”

담양·함평·영광·장성 예비후보

올해 총선에서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출마를 준비중인 박노원 예비후보는 22일 “악의적 루머를 퍼트리는 세력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전남지역 선거는 ‘민주당 공천=당선’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은 탓에, 총선 컷오프가 가까워질수록 경쟁 후보를 어떤 식으로든 깎아 내리려는 직간접적인 행위들이 잇따르면서 ‘루머전’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가족과 관련된 허위 사실



을 언급하는 저열한 정치 행태를 도려내고 정치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며 “지지를 얻어준 지역에 저급한 속임수로 지역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는 행태를 유권자 여러분 손으로 도려내달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적이 결코 없는데, 거짓 소문을 기획·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엄정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수목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